현대북한연구, 17권 2호(2014), © 2014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pp.260~295.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미·중관계와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

함택영(북한대학원대학교)

이 글의 목적은 미·중관계 변화 속에서 북한이 핵정치를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연관성을 고찰해보고자 함이다.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는 물론 지구적으로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정세인식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경로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미·중관계를 중심축으로 한 동북아 힘의 분포(distribution of power) 구조와 동북아의 힘의 균형 변화를 국력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군사위협의 특성 및 한계를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의 핵정치 역시 일면 미·중 간 힘의 역학관계라는 전략적 환경에 적응한 합목적적인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인식한다. '힘의 전이(power transition)'에 기반을 두어 본다면 과거와 달리 북한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 변화를 인지하고 더 이상 미국이 아닌 중국에 완전한 편승은 거부한 채 일정 부분 기대어가는 것으로 전략을 선회하였다. 결국 북한의 핵은 미국과의 협상용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계 속에서 중국의 지원 없이도 한반도에서 핵 균형을 통해 스스로 체제 보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자주노선의 새로운 형태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중이 아닌 남북이 나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 이 논문은 2011년도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년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는 긍정적 현실주의에 뿌리를 두고 남북관계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근간이다. 남북관계발전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만이 미·중의 경쟁 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안보의 자율성과 주도 역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미중관계,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남북관계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미·중관계 변화 속에서 북한이 핵정치를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1)]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는 물론 지구적으로 미·중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초기 북핵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에

1) '한반도 평화체제'란 일반적으로 남북한 간에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경제·사회적 교류협력이 제도화됨으로써 남북관계가 전쟁위험이 해소된 실질적인 평화공존 상태를 의미하며, 형식적으로는 한반도 군사질서의 유지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 실질적·제도적으로 평화가 정착된 상태라 할 수 있다. '평화협정/조약(Peace agreement/Treaty)'이란 교전국 대표자들 간에 전쟁상태를 종결, 평화의 회복, 평화복구 당사자들 간의 법적관계를 규정한 정치적 성격의 협정으로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전쟁을 법적으로 완전하게 종결시킴으로써 교전 쌍방 간의 적대적 관계가 정상적·평화적 관계로 전환된다. 그러나 단순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소극적 평화'에 국한시킬 경우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즉 통일로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좀 더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분단국가 간의 '적극적 평화'인 분단체제의 안정화와 함께 경제통합과 민족공동체 수립을 포괄한다. 이에 대한 더 상세한 논의는 함택영, "한반도 군축과 민족공동체 건설," 『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 한반도 안보질서의 전환과 평화체제의 모색』(서울: 아르케, 2004), 261~294쪽 참조.

진행되는 게임이었다면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제는 중국이 개입된 좀 더 복잡한 게임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과 핵정치는 미국과의 대화나 협상을 위한 것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 한반도와 북핵문제에 높은 관심을 모으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북한의 정세인식 변화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경로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자회담을 중심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최근 동북아의 안보환경이다. 중국의 국력이 지속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중국이 차지하는 국제적 위상과 역할은 미국 오바마(Obama) 행정부에 의해 G2로 명명될 정도로 격상되었다.[2]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기존 국제질서를 둘러싼 미국 등 기타 주변국들 간의 관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미·중 양국이 신형 대국관계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중국의 '적극적 방어' 이른바 반접근·지역 차단 전략이 서로 마주보며 달리고 있다. 미국의 핵선제공격 전략 개념에 대응하여 중국은 핵전략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핵우산 제공을 약속하는가 하면,[3]

---

2) 'G2'라는 용어는 2008년 국제정치학자 바그스텐(Fred C. Bergsten)이 포린어페어지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사용했다. Fred C. Bergsten, "A Partnership of Equals: How Washington Should Respond to China's Economic Challenge," *Foreign Affairs*, Vol. 87, No. 4(2008).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중국을 G2로 지칭하며 금융 위기, 지구온난화, 테러, 군축 등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연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G2'라는 용어가 중국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켜 대외정책의 자율성을 제어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평가하고 이 용어의 사용을 회피한다.

3) 2012년 12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합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1994년 중국과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성명에 근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부의 핵무기 공격 또는 위협이 닥친다면 중국은 상응하

심지어 중국이 1964년 핵실험 이후 유지해온 '핵 선제불사용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4] 이러한 중국의 부상과 미·중관계 변화, 그리고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국제정치 이론만을 활용하여 진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중관계를 중심축으로 한 동북아 힘의 분포(distribution of power) 구조와 동북아의 힘의 균형 변화를 국력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북한은 한국전쟁과 남북분단이라는 적대적 상황 속에서 핵 개발 주장과 핵 포기의 대가로 줄곧 체제 안전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군사위협의 특성 및 한계를 논의할 것이다. 북한의 선택이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해하면 미·중의 새로운 관계와 중국의 적극적인 행동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5] 현재 북한의 핵정치 역시 일면 미·중 간 힘의 역학관계라는 전략적 환경에 적응한 합목적적인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 미·중관계 중심의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는 안전보장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장'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다. "中國爲烏克蘭撑起 核保護傘," 『河南商報』, 2013年 12月 10日.

4) 『2012년 중국 국방백서』에는 1998년 국방백서의 첫 발간 이후 지속 포함되어온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不首先使用核武器政策, No-First-Use policy)'이라는 표현이 빠진 대신 제2포병의 임무로서 '핵 반격'을 명기하고, 핵공격 위협에 대해서는 "적이 중국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명시했다. 中國國防部, 『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國防白皮書』, 2013年 4月.

5) 2009년 7월 제1차 미·중 전략 및 경제 대화에서 중국의 왕광야(王光亞)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안보우려(reasonable security concerns)', '미·북 직접대화(direct talks)' 두 가지를 미국에 촉구하였다. "China urges U.S. to accommodate DPRK's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Xinhua*, July 29, 2013.

제기하고자 한다.

2. 동북아 안보환경의 불확실성과 미·중 경쟁 구조의 심화

한국 정부와 국민은 북한의 존재 그 자체를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인지한다. 북한의 체제와 이념, 핵무기 개발이나 군사도발은 물론 심지어 북한 '급변사태'까지 모든 형태의 안보위협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안보위협은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것만은 아니다. 동맹국이자 후견국인 미국의 안보지원에 대한 불안감, 즉 이른바 비대칭 동맹에서 강대국의 '포기'라는 위협인지(threat perception)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컨대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아울러 좀 더 동등한 한미동맹 혹은 한국의 자율적인 선택을 희구하면서도, 한편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재배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제1차 북핵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을 극력 반대한 것이나, 한·미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이후 한국이 원하지 않는 미·중 군사갈등에 휘말릴 것을 두려워하는 이른바 한미동맹이 지니는 '연루'의 위협이 제기되었다.

북한과 미국이라는 변수 외에도 탈냉전기 동북아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및 지역 내 불특정 안보위협이 한국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을 전망해볼 때, 탈냉전은 긴장 완화와 화해협력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지역 내 유동적인 힘의 균형, 역내 국가 간의 갈등, 다양한 이슈의 등장과 같은 '안보의 불확실성' 즉 '안보 상황의 유동성'과 '안보위협국가의 불특정성'이 한국의 대외

안보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환경, 특히 지정학적 특성에는 변화가 없다. 이 지역은 세계 4대 강국이 각축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특히 역내 국가 간에 아직도 2차 세계대전이나 냉전의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 채 잠재적인 적대감과 불신을 안고 있는 과거 역사 문제나 미해결된 영유권 문제가 남아 있다. 러·일 간의 '북방 4개 도서' 문제,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 한·일 간의 독도 문제 등 미해결된 많은 영유권 문제는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해양 및 도서 영유권 문제는 또한 어로 및 대륙붕 개발 등에 연관된 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다. 동북아 지역의 비국가 간 및 초국가적 갈등의 양상을 전망해보면, 민족적·종교적 분쟁의 개연성은 적으나 결코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는 장차 미·중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동북아의 안보 구도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부차적으로 티베트와 신장 등 소수민족의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제적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이 가지는 안보환경의 위협 요인은 탈냉전에 따른 범세계적 군비 통제 및 군축의 추세와 달리 여전히 이 지역 국가 간에는 국력의 물적 토대 증강에 발맞추어 군비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일 간의 경쟁과 같은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은 물론 장기적으로 미·중 간의 패권 경쟁과 같은 '힘의 전이(power transition)'마저 예상되는 곳이다.[6] 그럼에도 동북아는 유럽과 달리 '안보체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불안정한 지역이며, 복합적인 쌍무적 동맹에

6) John L.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2001), pp.396~402.

의해 안보가 유지되는 실정이다.

동북아 안보환경을 현재 진행 중인 군비 경쟁과 더 구조적인 향후 역내 국가 간 힘의 구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탈냉전기의 동북아 지역은 이러한 패권유지 및 잠재적 도전자 출현과 맞물려 새로운 군비 경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냉전에 따라 범세계적으로 군사비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는 각국이 군비 지출을 계속 확장하는 가운데 군비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냉전기의 군비 경쟁은 미·소 두 초강대국 간의 전략핵무기 경쟁과 동맹국들이 합세한 진영 간 경쟁이었다. 이에 비해 오늘날 동북아의 군비 경쟁은 진영 간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냉전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군비 경쟁이 다자간 경쟁, 질적 경쟁, 그리고 비대칭 경쟁으로 바뀐 것이다. 동북아의 군비 경쟁은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진영 간 대결구도가 어느 정도 다자간 경쟁으로 변화한 것과 동북아 지역의 활력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군비 지출을 위한 가용자원이 증가한 데에서 기인한다. 냉전체제의 해체는 미·소의 군비 감축으로 이어졌으나, 냉전체제의 해체는 또한 소련방의 해체를 가져왔다. 비록 오늘날 러시아가 잠재적 군사 강국이기는 하지만 구소련에 비해 경제적·군사적으로 몰락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재 러시아군은 1990년 소련군에 비해 훨씬 작고 초라하다.

동북아에서 미·소 두 초강대국 외에 군사비가 감축된 나라는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10년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북한뿐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장을 선택함으로써 비대칭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다. 동북아의 다자간 군비 경쟁은 남북한 비대칭 경쟁 이외에도 미·중 간의 경쟁, 중·일 간의 경쟁, 그리고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兩岸)관계 등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대중견제를 위하여 특히 '미·일방위협력지침'이나 1996년 양안의 위기 뒤에 나온 '미·일신안보선언' 등을 통해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였다. 미사일방어(MD) 계획은 북한 등 이른바 '불량국가'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하다. 즉 일본을 중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과 동시에 일본을 미국의 대중전략에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중국도 MD를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취하는 대중견제의 또 다른 수단은 타이완(臺灣)에 대한 안보 공약과 무기 판매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국내법인 1979년의 「대만관계법」을 제정하여 대만의 안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던 바 있다. 미국은 또한 부시 행정부는 물론 후속 오바마 행정부도 대만에 신예 무기 판매를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해·공군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는 것이다.[7)]

중국과 일본은 또한 도서 영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해양중시 및 원거리 투사(projection)의 국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각기 항공모함 내지 대형 헬기 순양함을 확보하는 등 해군력 및 장거리 공군력 건설에서 경쟁하고 있다. 양안 간 및 중·일 간 군비 경쟁을 보더라도 '질적 경쟁'의 측면이 강하다. 남북한이 지상군 위주의 군비 경쟁을 통해 병력을 늘려온 것과 달리, 동북아 각국은 해·공군력과 정보화전력을 중심으로 한 질적 군비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일·중·대만 그리고 미국은 병력을 대폭 감축하면서도 군비 지출을 늘리는 획기적인 질적 증강, 특히 이른바 군사기술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을 중시한다. 일본은 경제·기술대국으로서 핵기술, 인공위성 및 F-2 전투기

---

7) Robert D. Kaplan,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How Far Can Beijing Reach on Land and at Sea?," *Foreign Affairs*, Vol. 89, No. 3(2010), pp.33~35.

개발, 그리고 앞선 IT 능력을 활용하여 군사력의 첨단화·정보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의 현대화·정보화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한국전쟁에서 이른바 '인해전술'의 신화를 남긴 인민해방군은 이제 대량 동원에 의한 '인민전쟁' 개념을 고수하지 않고 병력을 대폭 감축하였다. 중국은 오히려 '핵억지하의 정보전' 혹은 '첨단기술 조건하의 국지전' 등 첨단기술군을 지향하였으며, 또한 열악한 과학기술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전력 선진국의 취약점을 노리는 이른바 '점혈(點穴)'전쟁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사일 전력, 전자기파(EMP) 무기·해커·바이러스 등 정보마비 무기, 고출력 레이저 등 중국 나름대로의 비대칭적 증강을 도모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공군력 등 첨단전력 증강 및 국력 과시를 위해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F-22 랩터(Raptor) 및 그 염가 축소판인 F-35 라이트닝 스텔스(Lightning Stealth) 전투기에 대항하는 스텔스 전투기 젠(殲)-20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일본과 한국은 아직 스텔스 전투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기종을 선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1950~1960년대 소련이 미국의 항공우주전력에 대항하여 항공기와 미사일 그리고 우주개발에 집중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동북아 지역은 또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지역이다. 지리적으로는 역외 국가이나 이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깊이 개입하고 있는 미국을 포함할 경우, 동북아는 미·러·중 세계 3대 핵보유국이 존재하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했으며, 일본·한국·대만 비핵 3국도 기술적으로 모두 핵보유가 가능하며 특히 일본은 매우 신속하게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가운

데 북한의 핵무기 개발 노력과 탄도미사일 개발, 배치 및 수출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저지라는 미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우리는 이미 1990년대의 북핵위기로 인해 남북한 간의 충돌은 물론 북·미 간의 무력사태가 확대되어 본의 아니게 전쟁을 치를 뻔한 경험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화생무기를 중심으로 북·미 간의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개연성은 낮지만 일본이 이른바 '예외국가' 지위를 탈피하고자 핵능력을 군수용으로도 활용하고자 할 때, 혹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되어 한국이나 대만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동북아는 핵 확산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과 불안정을 겪게 될 것이다.

동북아 힘의 구도를 볼 때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포진한 4대 강국의 존재는 이전과 다름없지만, 그 내부에서 급격한 순위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경이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이미 러시아를 대신하여 이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였으며, 패권국가 미국에 대한 잠재적 도전자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경제적으로는 러시아, 정치·군사적으로는 일본을 능가하는 역량을 갖추었다. 경제 총량으로 볼 때 중국은 2010년 구매력평가환율(Purchasing Power Parities: PPP) 기준은 물론 시장환율로 평가하더라도 일본을 추월하여 제2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총량뿐만 아니라,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고 대미 채권국으로서 미국은 물론 세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비록 전략 핵전력에서는 러시아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은 군사 현대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군사비 지출 측면에서 러시아를 능가하였다.

미국은 중국을 몰락한 소련·러시아의 뒤를 잇는 새로운 경쟁자 내지 도전자로 보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국력 상승과 아울러 군비 증강

에 관심과 우려를 나타낸다. 국제체제의 구조적 힘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은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 19~20세기 서구 제국주의에 침탈을 당한 역사적 체험, 민족주의적 성향 등으로 볼 때 중국이 이 지역의 수정주의·팽창주의 세력으로 등장할 것을 우려한다. 미국의 국방정책은 패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고자 군사기술혁신(RMA)과 핵군비 경쟁의 우위를 목표로 한다. 미사일방어계획(MD)의 주목적도 사실 중·러의 제2격 능력(핵보복 능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고, 다중적 동맹체제에 의한 미국 중심의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전 클린턴 행정부와 중국이 목표로 했던 '건설적 전략동반(자)관계'를 경쟁관계로 바꾸고, 더 노골적인 대중 견제정책을 추진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다시 자유주의적 외교 노선을 채택하여 2009년 4월 G-20 정상회의에서 '21세기 적극협력〔合作〕 전면적 관계'를 선언했으나, 아직 '전략적 관계'나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재정·금융 위기로 실추된 미국의 경제 재건과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전 세계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과 '전략경제대화'를 시작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아가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 등 중국의 국위 상승과 미국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이른바 'G-2 시대'가 때 이르게 도래하였다. 중국은 국력 상승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또한 국내 정치의 안정을 위하여 민족주의를 표명하고, 나아가 외교정책에서 공세적 수정주의 성향도 드러냈다. 2010년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전에서 보듯이, 미·중은 상당 기간 안보문제에서 협력과 견제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와 행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8)]

<표 1> 동아시아 각국의 국력 및 군사력 전망

국가	GDP(억 달러) (2010 불변가격)				2015 군사자산 (Rand 누적투자비 예측)[2]	
	2010[1]	연간 성장률 전망	2020	2030	1995 전망/ 1994 가격·환율 (PPP 추정)	2000 전망/ 1994 가격·환율 (PPP 추정)
미국	146,200	~2030: 2.0%	178,203	217,229	8,440	-
중국	57,450	~2020: 8.0% ~2030: 7.0%	124,030	243,986	? (3,130~4,560)	1,130~1,820 (3,860~6,340)
일본	53,910	~2030: 2.0%	65,711	80,095	1,630	1,658 (1,189)
인도	14,300	~2030: 5.5%	24,426	41,724	? (3,330)	813 (3,140)
한국	9,863	~2020: 4.5% ~2030: 4.0%	15,317	18,635	? (1,190-1,290)	569 (1,135)
대만	4,270	~2020: 4.5% ~2030: 4.0%	6,631	8,068	? (1,010)	-

주 1: CIA.
주 2: Wolf.
자료: CIA, *World Factbook*; Charles Wolf, Jr. et al., *Long-Term Economic and Military Trends 1994~2015: The United States and Asia*(1995); Charles Wolf, *Asian Economic Trends and Their Security Implications* (Santa Monica: Rand, 2000).

그러나 중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미·일과 이들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참여하여야 한다. 중국은 근래 '할 일은 한다'는 '유소작위(有所作爲)'도 내걸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향후 상당 기간 '능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리는' 이른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전략을 구사하며 쟁점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미국과 경합·갈등관계를 보일 것이다.

국력 추세를 볼 때 중국이 시장가격으로도 경제 총량에서 2030년

8) Elizabeth C. Economy, "The Game Changer: Coping with China's Foreign Policy Revolution," *Foreign Affairs*, Vol. 89, No. 6(2010), pp.142~152.

이전에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projection)은 중국이 향후 10~20년간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특히 소득수준 및 물가 상승에 따라 성장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다. 또한 경제 총량에서 앞서게 된다고 해서 곧 힘의 전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경제 총량에서 앞선다 할지라도, 19세기 영국과 20세기 미국이 보여주었듯이 경제생산성·과학기술의 우위·사회문화적 가치에서 다른 나라들을 이끌지 못한다면 헤게모니를 누릴 수 없다. 이 점은 경제력을 평가할 때 소득과 재산(즉 '축적된 이전의 소득')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GDP와 같은 특정 연도의 경제 총량은 경제력의 '저량(貯量, stock)'이 아니라 '유량(流量, flow)' 개념, 즉 특정 시점의 소득을 나타낼 뿐이다. 또한 중국이 경제 총량에서 미국을 앞선다 할지라도 군사력(누적 군비 투자, 즉 군사력의 저량)에서는 미국이 이후에도 상당 기간 우위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세계적 수준에서 서유럽 제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한국과 강력한 동맹관계에 있으며, 대만과 적극적인 군사협력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는 현재 기회주의적인 대중 편승전략을 취하는 측면이 있지만, 중국이 강대해질 경우 중국에 대한 견제 욕구가 강해질 것으로 볼 수도 있다.[9)]

---

9) 중국의 부상에 대한 각국의 반응은 편승에서부터 균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Robert Ross, *Chinese Security Policy: Structure, Power,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2009); Jae-Ho Chung, "East Asia Responds to the Rise of China: Patterns and Variations," *Pacific Affairs*, Vol. 82, No. 4(2009/10), pp.657~675; Yasuhiro Izmikawa, "The Rise of China, US-China Relations, and the Future of East Asia," Taik-young Hamm and Kun Young Park, eds., *Sino-U.S.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 (Seoul: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9), pp. 187231 참조.

내부적·외부적 차원의 힘의 '균형화(balancing)'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힘의 전이를 이루어내는 것은 경제 총량에서 우위를 점하고 상당 기간 격차를 벌인 이후에야 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미·중 간 힘의 전이가 일어나더라도 그 격차가 확연하지 못하여 탈냉전기 미국이 누렸던 수준의 일방적 패권을 쟁취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요컨대 향후 동북아 국제체계는 구조적으로 확실한 힘의 우위체제보다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힘의 균형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

3.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과 대응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 중반 이후 원자력 관련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제부터 핵무기 개발을 본격 추진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과거 북한은 산업발전용으로 주장해왔으며, 핵무기 개발 시점은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그러나 2014년 현재 북한은 이미 3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헌법에 핵무기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어떠한 필요로 인해 언제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가 하는 문제는 북핵문제의 경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핵 위협을 처음 제기한 것은 한국전쟁부터이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1월 30일 미국의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후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파괴하는 데 26개의 핵무기가 필요한 표적을 선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은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해 어리석

은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실제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핵무기를 쓰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0]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비밀 보고서에 따르면 핵무기가 공포의 증폭(bunus fear)이라 불릴 만큼 미 행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북한과 중공군에게 핵 위협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전쟁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1957년 이후 남한에 배치되었던 전술핵무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핵 위협을 경험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미국은 1957년도부터 일본에 배치했던 핵무기를 철수하여 한국에 배치했다.[11] 김일성은 "남조선에 신형무기를 반입하며 남조선을 미국의 원자기지로 전변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전협정의 일방적 파기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아세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경고했다.[12] 또한 수적으로도 "남조선에는 핵폭

---

10)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 제3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0년 12월 21일)," 『김일성 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83, 203쪽; "조선노동당은 조국해방전쟁승리의 조직자이다: 조선로동당 중앙당학교 교직원, 학생들 앞에서 한 연설(1952년 6월 18일)," 『김일성 저작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44쪽.

11) 미국은 1951년 체결된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했으나, 일본 국민들의 강력한 반핵운동으로 핵무기를 일부 남한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1957년부터 주한미군 2개 보병사단을 핵무기로 장비를 갖춘 5개 전투단으로 편성된 '팬토믹' 사단으로 개편하였다. 이렇게 배치되었던 남한의 핵무기는 1991년 9월 27일 부시 대통령의 전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무기 철수 발표로 남한에서 철수하게 되고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핵 부재 선언'을 하였다.

12) 김일성, "사회주의진영의 통일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7년 12월 5일)," 『김일성 저작집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404쪽; "귀국하는 중국인민지원군 환송대회에서 한 연설(1958년 3월 11일)," 『김일성 저작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83쪽.

탄을 비롯한 1,000여 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전개되여 있으며 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의 밀도는 나토성원국들에 전개된 핵무기의 밀도보다 4배나 높다"고 위협을 강조했다.[13)]

이 시기 미국이 남한에 280mm 핵대포와 지대지 미사일인 어니스트 존(Honest John), 사정거리 1,100km의 핵탄두 마타도어(Matador) 크루즈(cruise) 미사일과 사정거리 1,800km의 메이스(Mace) 등을 차례로 들여오면서 남한에 배치된 핵탄두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확대되었다. 이는 북한 지역을 넘어 중국과 소련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김일성은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만 침략하려고 한다면 남조선에 자그마한 핵폭탄을 3개쯤 가져다놓아도 될 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1,000여 개의 핵무기를 배치한 목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을 견제하고 침략하려는데 있다"고 언급했다.[14)] 또 이는 미국이 "군사적 요충지인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 제패를 실현하려는 야망"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식민지군사기지인 남조선은 방대한 핵무기저장고로,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였다"고 비판했다.[15)]

---

13) 김일성,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련합회의에서 한 결론(1986년 6월 20일)," 『김일성 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131~137쪽. 실제 미 국방부가 1978년 2월 작성한 '1945년부터 1977년까지의 핵무기 배치역사'라는 일급비밀문서(TOP SECRET)에 따르면 1960년대 940여 기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는 등 1991년까지 33년 동안 아시아에서 최고의 양적 팽창을 기록했다.

14) 김일성,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미국공산당대표단과 한 담화(1988년 6월 24일)," 『김일성 저작집 제4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58쪽.

15) 김일성,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131~137쪽; "네팔신문 『아스

북한은 1970년대 들어와서는 남한과 미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팀스피리트(Team Spirit) 합동군사훈련으로 인한 핵 위협을 줄곧 환기시켜왔다. 김일성은 이에 대해 팀스피리트 훈련을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이며 "핵전쟁 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조선반도뿐 아니라 극동과 아세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16] 또한 "올해 봄에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미공군『비-52』전략폭격기가 오키나와로부터 남조선에 날아와 폭격연습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하였다"고 언급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했다.[17]

북한은 이에 대해 '전 국토의 요새화'[18]와 '국방경제병진정책' 등

티토』 책임주필과『아크바르』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7년 7월 23일),"『김일성 저작집 제40권』, 337쪽.

16) 김일성, "핀란드인민민주련맹 위원장과 한 담화(1982년 4월 9일),"『김일성 저작집 제3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06쪽; "일본사회당 기관지『샤까이신뽀』 편집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5년 10월 9일),"『김일성 저작집 제3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182쪽; "인도네시아『메르데까』 신문사 부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6년 3월 6일),"『김일성 저작집 제39권』, 368~369쪽;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1986년 12월 30일),"『김일성 저작집 제40권』, 234쪽.

17) 김일성,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상무취체역인 편집국장 일행과 한 담화(1977년 4월 23일),"『김일성 저작집 제3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194쪽.

18) '전 국토의 요새화'는 1962년 12월 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으로 채택된 4대 군사노선의 하나다. 1962년 채택된 '전국을 요새화'는 산악이 많은 한반도 지형적 특성을 이용해 핵 위협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일성은 '전국을 요새화'한 이유로, "우리에게는 원자탄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원자탄을 가진 놈들과도 싸워서 능히 견디여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김일성은 "동무들이 군사학에서 원자탄의 효력과 그 방위에 대해서 배웠겠지만 땅을 파고 들어가면 원자탄은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 "우리 인민군대를 혁명군대로 만들며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관철하자(발췌): 김일성군사대학 제7기 졸업식에서 한 연설(1963년 10월 5일),"『김일성 저작집 제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445~447쪽.

과도한 군사주의화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과도한 군사비 부담으로 군축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19] 1980년대 들어서는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심해지자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등 평화에 호소하는 전략을 내세우기도 하였다.[20] 김일성은 1983년 "지금 남조선에는 4만여 명의 미군과 70여만 명의 남조선괴뢰군이 있으며 1,000여 개의 핵무기가 전개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군대는

---

19) 군사비 부담 속에서 김일성은 지속적으로 군축을 주장해왔다. 이미 1950년대에 남북의 병력을 각각 10만 명 혹은 그 이하로 줄이자"고 주장해왔고 1972년에는 "외래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방위하는 데는 남북의 군대가 모두 20만 명만 있어도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되면 "인민들의 군사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들어서도 "북과 남의 무력이 10만 명 이하로 축감되면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 등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전제조건처럼 달고 있어 남한 당국의 호응을 받기 어려웠다. 김일성, "사회주의건설에서 인민정권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1957년 9월 20일)," 『김일성 저작집 제11권』, 309~310쪽;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북과 남 사이의 고위급정상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 대표들과 한 담화(1972년 5월 3일, 11월 3일)," 『김일성 저작집 제2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89~190쪽; "민족올림픽위원회협회 위원장인 메히꼬출판회사 위원장 겸 사장 일행과 한 담화(1991년 6월 5일)," 『김일성 저작집 제4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146쪽.

20) 북한은 군사적 방식으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끼면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등 '반핵'에 호소하는 방식을 병행했다. 북한의 비핵화 주장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구체화하고 정교해졌다. 김일성은 1986년 "핵전쟁의 위험이 오늘처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 때는 일찍이 없다"며 "새로운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시대의 엄숙한 요구이며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라고 비핵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를 위해 구체적 방법으로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세아 지역에서 열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려면 이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일성,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85년 6월 9일)," 『김일성 저작집 제39권』, 93~97쪽;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131~137쪽;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인류 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에 참가한 대표들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1986년 9월 6일)," 『김일성 저작집 제40권』, 168~175쪽.

남조선괴뢰군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군사장비면에서도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은 현대적인 미국식무기로 무장하고 있지만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가 자체로 만든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라며 군사력이 열세라고 스스로 평가했다.[21)]

그러는 사이 소련의 해체 등 사회주의권 체제 전환 현상이 일어났고, 북한도 '고난의 행군' 등으로 상징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경제난으로 인해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재래식 무기 분야는 상대적으로 열세가 더해졌기 때문에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남한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기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4. 미·중의 힘의 전이와 북핵문제의 경로 변화

한반도에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이 이루는 관계는 변화를 거듭하였다. 기본적으로 우선 힘의 비대칭이 존재하여, 북한은 미국, 중국과 같은 위상에 있지 않고 약소국의 입장에 있다. 그러나 약소국인 북한은 강대국인 미·중관계 변화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강대국들의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북핵문제의 경로를 변화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의도와 최종 목표가 '정권

21) 김일성,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뻬루아메리타인민혁명동맹대표단과 한 담화(1983년 6월 30일, 7월 1일, 5일)," 『김일성저작집 제3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04쪽.

생존'과 더불어 '정상국가화'라는 점에는 대부분 이견이 없다. 그러나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핵을 이용해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정권의 생존을 보장받을 것인가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핵개발의 의도가 좀 더 정교하고 세분화되면서 북한은 북핵 게임의 룰을 바꾸어왔다. 바로 북한이 주도적으로 '북핵문제 진행의 경로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와 미·중관계 변화 속에서 북한은 이미 두 번의 북핵문제 진행 경로 변화를 거쳐 세 번째 시기로 들어섰다. 첫 번째 시기는 냉전시기 북한의 핵개발과 함께 시작되어 1차 핵 위기가 봉합된 1994년 제네바합의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미국과 적대적 관계하에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확실한 안전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구소련과 사회주의체제마저 붕괴되자 북한은 핵을 가진 국가는 어느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핵을 통한 안전보장을 추구하였다.[22] 그러나 이시기에도 김일성은 "미국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는 '핵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나라의 정세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만한 힘도 없고 또 만들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핵개발 의혹을 계속 부인하였다.[23]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핵사찰을 일방적이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핵사찰을 하려면 핵무기가 없는 우리에 대해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핵무기가 있는 남조선에 대해서도 같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4]

---

22) 황장엽과 함께 북한에서 망명한 김덕홍은 김일성과 김정일 간의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1990년대 초반으로 본격적인 핵개발 시점을 추측하여 증언한 바 있다. 이는 소련의 잠재적 핵우산 아래 있었던 북한으로서는 소련의 해체 징후가 커다란 안보 위험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핵실험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23) 김일성, "에꽈도르좌익민주당대표단과 한 담화(1991년 5월 3일)," 『김일성 저작집 제43권』, 62쪽.

이후 두 번째 시기에 북한은 핵을 통해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의 포괄적 패키지를 요구하며, 이는 미국을 통한 근본적인 생존방법과 정상국가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핵문제의 방점이 미국과의 대화에 찍혀있었다. 소련이 붕괴되고 미국이 유일초강대국이 된 상황에서 북한의 겉으로는 미국을 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실제로는 생존과 정상국가가 되기 위해 미국의 도움과 인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에는 넘어야 할 산으로 인식이 변화하였다고 본다.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목표는 미국을 통한 정권의 생존과 정상국가화이며 이를 위해 미·북간의 수교와 평화체제 수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미인식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서이다. 「제네바 기본합의」로 북한은 핵카드를 활용한 미·북간 직접대화, 미·북관계 개선, 안보우려 해소, 경수로 지원을 통한 에너지난 해결 등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25] 조명록의 방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북한 미사일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체제문제의 주장을 경청하는 등 북·미 간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제2차 핵위기를 거쳐 9·19 공동성명에서 2·13과 10·3 합의로 이어지는 6자회담 속에서 2007년 전후시점에 북한은 이미 미·중관계 활용의 공간이 유효함을 인식하고, 과거 중·소간 외줄타기 외교를 한 시기와 같이 미국 측에 접근하여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24) 김일성, "일본 교도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91년 6월 1일)," 『김일성 저작집 제43권』, 76쪽; "일본 '이와나미' 서점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91년 9월 26일)," 『김일성 저작집 제43권』, 226쪽.

25)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2003년까지 200만kw 경수로 제공, 1호 경수로 완공 시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는 경제적 대가를 보장받음으로써 핵을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했다.

맞추고 미국에 체제 보장을 요구하였다. 2007년 3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을 만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 관심이 있는지를 묻고, 미국이 북한과 전략적 관계를 맺고 제한적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북한도 미국의 대중견제 전략에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중국을 이용하여 미국에 접근하고자 했던 좋은 실례이다.

북한의 핵포기는 북한이 생각하는 최종 목표인 체제의 안전이 보장되고 미래에도 안전하다고 여길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은 "에너지, 식량, 제재 해제 등과 같은 일련의 당근 제공은 북한의 완전하며 불가역적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과정이나 최후의 협상 마무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이는 북한의 목표가 아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바라는 것은 핵포기에 따른 일련의 보상이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같은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미래 동북아 구상 속에 북한의 존재와 체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결국 두 번째 북핵 시기를 통과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를 평화체제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근접시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게 북한 체제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은 물론 미래 발생가능한 모든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을 보장해 줄 때 핵폐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구로 북핵문제의 두 번째 시기 역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되어 진행 중인 세 번째 북핵 시기는 2008년 김정일 와병 이후로 후계체제로 이어지는 내부 정치·사회적 안정의 요구와 2009년 미·중전략경제대화로 시작을 알린 G2로 대변되는 미·중관계 등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핵을 체제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핵개발 및 보유에 대한 전략 변화를 기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이 우위이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중의 전략적 균형, 또는 이미 일부의 영역에서 선택적으로 중국에 역전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동북아 지역 안보환경 변화를 유인한 것이기보다 오히려 이를 반영한 북한의 전략적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행동에는 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은 협상용과 보유용의 이중성을 지닌 핵개발에 대해 과거에는 미국으로부터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협상용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제 보유용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 이상 북한 핵의 전략적 목표가 미국과의 대화나 미국의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한 관심끌기용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에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고려한 것이며 미국과 정리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을 통한 미국에 접근'이라기보다 '중국을 통해 미국과의 문제 해결'이 더 적절하다. 이제 북한에게 있어 미국은 행동에 목표가 아니며 미국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과정의 부산물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힘의 전이(power transition)'에 기반을 두어 본다면 북한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 변화를 인지하고 더 이상 미국이 아닌 중국에 기대어가는 것으로 전략을 선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체제 보장을 보장받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연장선에서 대남관계에 있어서 경제지원 및 협력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가 과거 미·소관계와 같이 대립

과 갈등의 제로섬(Zero-sum) 관계가 아닌 협력과 경쟁의 논 제로섬(Non Zero-sum) 관계라는 점에서 중국이 언제든지 북한을 버릴 수 있다고 보고 중국에 완전한 편승은 거부하고 일정 부분 기대어가는 것이다. 결국 핵은 미국과의 협상용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관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보유용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의 지원 없이도 한반도에서 핵 균형을 통해 스스로 체제 보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자주노선의 새로운 형태인 것이다.

내부적으로도 그 시기부터 북한은 불능화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면서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하였다.[26]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우선 안전을 보장받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대북 적대시정책의 종료,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의 종료를 요구한 것이다.[27] 「9·19공동성명」에서 미·북 관계정상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등이 핵무기 포기의 대가였던 것에 비하면 북측의 요구 수준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이 새롭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사실이다. 북한은 2009년 4월 로켓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해 경수로용 원료인 우라늄 농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뒤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가 채택되자 우라늄 농축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북한이 「9·19

---

26) 먼저 북한의 목표는 2012년까지 '사실상(de facto)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Selig S. Harrison, "Liv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17, 2009; Scott A. Snyder and Bernard Gwertzman, "Dealing with North Korea Difficult Amid Possible Successio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terview(CFR.org, April 28, 2009).

27) Morton Abramowitz, "North Korean Latitude," *The National Interest*(Feb. 26, 2009).

공동성명」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우라늄 농축을 이용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북핵문제는 한층 복잡해졌다.[28]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노선 변화는 김정일 사후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권이양기(2009~2011)에 해당하는 2009년부터 북한은 장거리로켓 시험발사(2009.4.5), 2차 핵실험(2009.5.25),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2010.11.12) 등 일련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노력을 가속화하였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즉 2012년 2·29 합의를 파기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2012.4.13)하였고,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으로 명시했으며, 2차 장거리 로켓 발사(2012.12.12)와 3차 핵실험(2013.2.12)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2013년 3월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경제적 혜택과 교환하기 위한 흥정물로 핵을 보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을 성공하고 당중앙위 전원회의(2013.3.31)에서 핵보유국으로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전략적 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비핵화 전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29]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

---

28) Siegfried Hecker, "From Pyongyang to Tehran, with nukes," *The News ForeignPolicy.com* (May 26, 2009).

29) 이러한 병진노선을 채택함에 따라 ①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발전시켜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② 세계 비핵화 전까지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다. 북한은 '병진노선'을 내걸면서 핵무장이 경제건설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정은 제1비서는 중앙위원회의 보고를 통해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를 군비 경쟁에 끌어들여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 난관을 조성하려고 책동"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병진노선은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

(2013.4.1)에서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동 법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법령이며, 특히 북한의 핵전략 및 정책을 법적으로 정당화했다는 의미이다.[30]

북한은 4월 18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에 이어, 6월 16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히면서 대미 고위급회담을 제의하였다.[31] 중대담화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북핵 폐기만을 위한 비핵화가 아니며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며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장 철저한 비핵화"라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① 군사적 긴장 상태의 완화, ②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③ 미국이 내놓은 '핵 없는 세계건설'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2013년 4월 13일 한·미 외교장관은 「9·19공동성명」에 입각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32] 그러나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로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요구하며 이 제안을 거부하였다.

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큰 힘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30) 『조선중앙통신』, 2013년 4월 1일.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대변인 중대담화," 『조선중앙통신』, 2013년 6월 16일.

32) 2013년 4월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은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에 발표된 「한·미 외교장관 공동성명」(4·13)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2005년 6자회담 내용을 실행할 것"이라며, "국제적인 의무의 준수와 함께 약속이행"을 주문하였다. Joint Statement adopted at ROK-US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April 12, 2013.

그 이유는 9·19공동성명이 변화된 복잡한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과 특히 미·중관계 변화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고 북한이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3년 10월 3일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은 미·일 2+2 외교국방장관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시작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불가침협정(Non-aggression Agreement)'의 체결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AP통신의 최고경영자 게리 프루잇(Gary Pruitt)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적대적인 대북정책만 버린다면 양국의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다"며 케리 국무장관의 발언에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성명을 통해 케리 국무장관의 '불가침협정' 제안을 비판하며 '선 핵무기 포기, 후 불가침' 주장의 철회, 봉쇄조치와 군사적 압박공세 등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 대북 제재의 해제와 대북 핵 위협의 완전한 청산 등을 주장하였다.[33]

북한은 2014년 3월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 않겠다"며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유엔 등 국제기구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핵개발 강화 의사를 강하게 내비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당분간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유지하며 제한적인 개방경제로 나아가는 타협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단계에서 경제·핵무력 발전 병진노선의 실패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현재 북한의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핵 자주노선 전략에서 볼 때 가장 합목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으로 판단된다. 향후 북한은 북핵문제의 경로를 미·중관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혁·개방에도 체제가 붕괴하

33) 『조선중앙통신』, 2013년 10월 12일.

지 않을 수 있는 체제내구성 확보를 고려하여 속도를 조절하며 진행시켜 나가려 할 것이다. 이제 북한에게 비핵화를 위해 평화체제는 더 이상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단순히 필요조건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체제 존속은 개방의 딜레마가 아닌 핵보유의 딜레마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위기는 개방 없이 극복될 수 없으나, 반대로 핵을 끝까지 보유한 채 개방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선택한 세 번째 시기 북핵문제의 경로도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에 치우친 북·중·미 부등변 역삼각형의 형태로 평화체제와 비핵화 문제가 진행된다면 과연 우리의 위치는 어디이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5. 맺음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남북한의 오랜 상호대립과 불신의 역사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회의주의 혹은 '비관적 현실주의'를 이 땅에 심어놓았다.[34] 평화통일에 대한 비관적 현실주의는 통일정책을 분단관리로, 평화를 안보라는 하위개념으로 대체시켰다. 나아가 한미동맹에 의존하다 보니, 자주성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자율성을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34) 현실주의자들은 국제 평화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로 소극적 평화이다. 이러한 냉전적 안보관에 집착하는 '비관적 현실주의'는 예를 들면 군축(disarmament) 대신 냉전적 사고에 기반을 둔 군비통제(arms control)를 강조한다. 함택영, "한반도 군축과 민족공동체 건설," 262~266쪽.

자세는 '긍정적 현실주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35]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는 긍정적 현실주의에 뿌리를 두고 남북관계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근간임을 주장한다.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 즉 남북관계발전이 미·중의 경쟁 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외교안보의 자율성과 주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관건이다. 이에 의거하여 군사안보를 중심으로 한 한·미 전략동맹관계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병행발전과 자주적 대북정책의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뿐만 아니라, 관계정상화 및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어, 북핵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처지에 있다. 이제 막연히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과연 누가 주도적으로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고 북한의 비핵화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따라 비핵화의 가능성과 진행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 남과 북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관계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미·중관계 속에서 남과 북이 주도권을 상실할 경우 자칫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가 분단의 항구화로 귀결될 수

---

35) 이러한 '긍정적 현실주의'는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주의를 통해 바라본 한반도 미래에 대한 전망들은 어둡지만 변화하는 세계에 대비하는 올바른 태도는 긍정적 현실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국가 간에 협력해 안전 보장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논해지며 오히려 국가와 국가권력 및 국가안보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촉구한다.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서울: 법문사, 1998), 365쪽.

있다.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핵문제의 해결이 남북 간의 평화공존을 보장해줄 수는 있지만, 통일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평화체제의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가 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에 기초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주변 강대국의 주도로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하며 달성되느냐에 따라 분단이 항구화 될 위험성도 안고 있다.

현재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미·중관계의 큰 틀 속에서 북한이 선택의 우선권을 쥐고 있는 구조로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상호 시너지(synergy) 효과를 주기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남북관계의 개선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평화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와 함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가 동시에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선 우리 스스로 독립된 하나의 꼭짓점을 만들고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문제의 병행에 있어 우선순위를 조율하는 조율자의 역할을 남과 북이 함께 해나가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전재되지 않은 강대국에 의한 종전선언이나 관계정상화는 남북관계를 '차가운 평화(cold peace)'로 전락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는 오히려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됨에 따라 한반도 분단 구조의 고착화 및 대북 유화정책 구사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의 단정적 평가는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을 방해할 수 있다. 분단은 이미 60년 이상 지속되어왔으며, 분단 구조의 고착화에는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

하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평화공존을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북한이 체제와 정권의 붕괴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현재시점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미국·일본과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져 북한이 당면한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비핵화가 실현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북한이 요구하는 안보와 생존은 현재의 보장이 아닌 미래를 포함한 영구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접근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절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가정을 전제해서는 안 된다.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우려(resonable security concerns)'를 해소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을 설득하고 떳떳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는 미·중이 아닌 남북이 나서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 동북아 평화협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에 역량을 쏟아야 할 것이다.

■ 접수: 7월 2일 / 수정: 7월 28일 / 채택: 8월 4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김일성, 『김일성 저작집 제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1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2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3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3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3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3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4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_____, 『김일성 저작집 제4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4월 1일, 6월 16일, 10월 12일.

2. 국내 자료

한국인권재단, 『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 한반도 안보질서의 전환과 평화체제의 모색』(서울: 아르케, 2004).

함택영,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딜레마," 장달중 외, 『현대 북한학 강의』(서울: 사회평론, 2013).

_____,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서울: 법문사, 1998).

3. 국외 자료

1)단행본

Mearsheimer, John L.,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New York: W. W. Norton, 2001).

Ross, Robert, *Chinese Security Policy: Structure, Power, and Politics*(London: Routledge, 2009).

Yasuhiro, Izmikawa, "The Rise of China, US-China Relations, and the Future of East Asia," Hamm, Taik-young and Park, Kun Young eds. *Sino-U.S. Relations and the Korean Peninsula*(Seoul: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9).

2)논문

Abramowitz, Morton, "North Korean Latitude," *The National Interest*(Feb. 26, 2009).

Bergsten, Fred C., "A Partnership of Equals: How Washington Should Respond to China's Economic Challenge," *Foreign Affairs*, Vol. 87, No. 4(2008).

Chung, Jae-Ho, "East Asia Responds to the Rise of China: Patterns and Variations," *Pacific Affairs*, Vol. 82, No. 4(2009/10).

Economy, Elizabeth C., "The Game Changer: Coping with China's Foreign Policy Revolution," *Foreign Affairs*, Vol. 89, No. 6(2010).

Hecker, Siegfried, "From Pyongyang to Tehran, with nukes," *The News Foreign-Policy.com*(May 26, 2009).

Kaplan, Robert D.,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How Far Can Beijing Reach on Land and at Sea?" *Foreign Affairs*(Vol. 89, No. 3, 2010).

Snyder, Scott A. and Gwertzman, Bernard, "Dealing with North Korea Difficult Amid Possible Successio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terview. CFR.org. (April 28, 2009).

3) 신문

Harrison, Selig S., "Living With A Nuclear North Korea,"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17, 2009).

"中國爲烏克蘭撑起 核保護傘,"『河南商報』(2013年 12月 10日).

4) 기타 자료

"China urges U.S. to accommodate DPRK's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Xinhua*(July 29, 2013).

Joint Statement adopted at ROK-US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April 12 (2013).

中國國防部,『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 國防白皮書』(2013年 4月).

Abstract

Exploring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US-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s Perception of Security Threat

Hamm, Taik-young(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how North Korea promoted the nuclear politics amidst the changing US-China relations and explore its association with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Currently, US-China competition is deepening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across the globe and the rising power of China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ath of change for North Korea's political perception especially toward its nuclear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distribution of power in Northeast Asia centered around US-China relations and the changing power balance in the region with a focus on national power and military strength. This paper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North Korean security and military

threats. The current North Korea's nuclear politics is a result of strategic choice to adapt to the strategic environment of power dynamics between the US and China. Based on power transition theory, North Korea recognizes that unlike the past, US-China relations is changing due to rising power of China. North Korea is refusing to ride on China's coat-tails but instead opting to adopt a less-dependent, leaning strategy on certain issues. Ultimately,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s not a bargaining chip toward the US but a new form of autonomous policy line under the strategic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an attempt to ensure regime security on its own through nuclear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the help of China.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establishment of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top agenda that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embark on together—not the US or China. In other words, it is crucial for South Korea to gain diplomatic autonomy and leadership capacity through taking the lead in the Korean peninsula affairs in the current atmosphere with rising US-China competition. Thus, South Korea should take a more assertive position rooted in positive realism and focus on inter-Korean relations to resolv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build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Keywords: US-China relations, North Korean nuclear issu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inter-Korean relations